



[종합] SK텔레콤 매출 17.5조 신사업으로 '반등' 08



Economy

코스피	2491.75 (-33.64)	코스닥	858.22 (-41.25)
금리 (최고액 3년)	2.29 (+0.04)	환율 (원·달러)	1088.50 (+8.80) (5일)

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 혐의 대부분 무죄” 353일만에 ‘자유의 몸’

‘묵시적청탁’ 허구에 갇혀... 총수의 잃어버린 1년

JY 항소심 선고공판

징역 2년6월·집유 4년 선고 뇌물공여·재산도피 등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년여 수감생활 끝에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14일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구속된 후 353일 만에 석방됐다.

〈관련기사 2·3면〉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정유라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등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해왔다. 승계에 도움이 될 개별 현안으로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합병으로 인해 삼성SDI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물산 주식 축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시도 등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면서도 묵시적·포괄적 청탁은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실존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 자체가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

는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현안이 사후적으로 효과가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의 주장과 같이 승계 작업을 위한 현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포괄적 승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묵시적 청탁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사사실 중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와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등이 부정한 청탁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에 대해 인식했다고 볼 수 없었다며 1심과 달리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에는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등 204억원을 출연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에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도 무죄로 판단했으며 전지훈원과 마필 구입대금 등 78억9430만원에 상당하는 재산국외도피 혐의 역시 무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이 나온 이유는 승마지원에 있다. 재판부는 마필과 차량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최순실, 정유라 등에 사용권이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필 사용권의 가액은 산정

하지 못했다. 또한 승마지원을 위해 코어스 포츠에 제공된 용역대금 전액(36억3484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어 용역대금의 횡령을 인정하며 이

와 연관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유죄로 봤다.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승계 작업과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과 합목적성, 정치권력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뇌물 제공 경위와 방법, 뇌물의 대가로 취득한 현실적 이익의 부존재,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등을 고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metroseoul.co.kr



5일 원·달러 환율은 8.80원 오른 1,088.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금리·유가 뛰고, 원화값 치솟고 韓경제 ‘신3高’ 복병

원화 가치와 유가는 오르고 인플레이션 걱정은 커지는 ‘신(新)3고(高)’가 한국 경제의 회복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느리게 달리던 자전거(한국경제)가 멈춰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달러 인덱스는 88포인트다. 선진국 간 금리차와 미국 쌍둥이 적자 등을 적용해 산출한 미 달러의 적정 수준은 98포인트

이다.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하락(원화값 상승)하고 있다. 올해 1월 평균 환율은 달러당 1067원으로 1년 전보다 10.0% 하락했다. 작년 12월 하락률(8.2%)보다 1.8%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하나금융투자 소재용 연구원은 “트럼프와 성향이 비슷한 레이건 대통령은 자국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 달러 약세를 압박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쌍둥이 적자에 대한 부담이 불가피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및 환율보고서 등을 이용해 정책적으로 달러 약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기업은 그동안 버팀목이 됐던 환율 효과가 사라지고 원자재(원유가격) 가격까지 오르는 열악한 환경에서 수출전쟁을 치러야 한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0원 가량 오르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은 8000억원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연간 1조2000억원, 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 연구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경우 자동차업체 매출이 연간 4200억원 감소한다.

현대경제연구원 박용정 선임연구원은 “정보기술(IT),

석유화학,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집중된 수출제품을 다변화해 원화 강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기에 유가하락까지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다가 오고 있다.

지난 2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65.45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를 최대 복병 중 하나로 지목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간은 각각 배럴당 80달러, 78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원자재값 ↑... 수출戰 우려 수출 제품 다변화 필요

국제유가 상승 영향 휘발유값 27주 연속 ↑

JP모건 등 월가 금융기관 올 3회 이상 금리인상 전망

유가가 하락하면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국 경제에 충격을 줘 글로벌 경제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이 우려된다.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이 27주 연속으로 올랐다. 또 다른 복병은 인플레이션이다.

미 노동부가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1월 고용지표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2.9%로 8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8%까지 올라갔고, 지난달 공개된 1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 근원 PCE 가격지수도 1.5% 상승했다.

이는 채권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2월 2일 증가기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841%이다. /김민호 기자 kmh@



휴전벽 앞에서 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 선수촌에서 제막한 휴전벽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적혀있는 글귀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대부업 법정금리 인하 준수 집중단속

서울시 명절기간 서민 피해 예방 이달 8일~4월30일 단속



서울시가 오는 8일 인하되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관련기사 11면〉

까지 서울시(공정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 금융감독원, 중앙전과관리소, 자치구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대부업자 준법교육 미이수와 장기 미수검,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 96개소, 불법 스팸 광고문자 발송 의심 대부중개업체 4개소 등 총 1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법정 최고

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자필서명과 이자율 기재) 준수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과 불법 광고성 스팸 문자 전송 여부 등이다.

또한 민원이 자주 발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통시장이나 상가밀집지역 등 서민들의 접촉이 쉬운 업체에 대해서는 준법영업 지도를 병행해 건전한 대부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범중 기자 joker@